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1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질문하는 언론은 어디에?
• 날 짜	2022년 1월 26일

질문하는 언론은 어디에? 후보 행보·발표 공약 받아쓰기 보도에 그쳐

모니터 기간	2022년 1월 17일(월)~23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대선이 4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배우자 논란, 상호 의혹 제기와 공방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주말인 1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을 찾아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부터 2주간 부산에 머무르며 선거 지원에 나섰고, 2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PK지역을 방문하는 등 대선후보와 당대표의 행보가 이어진 한 주였다.

지역언론은 <표 1>에서와 같이 발표된 공약을 전달하면서도, 각 후보와 정당의 행보 일정으로 전하거나 선거전략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전하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지역신문은 국민의힘 당내 갈등과 선거판세를 전달하는 보도에 정치면을 할애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정책·공약	5	8	2	4	2	21
후보·정당행보	6	1	2	2	5	16
선거전략/판세	4	7	2	0	1	14
후보·배우자 의혹, 논란	4	6	0	0	0	10
갈등·공방	3	3	0	0	0	6
기타	1	1	0	0	0	2
보도량 합계	23	26	6	6	8	69

△ 표1 대선 보도량 및 주요주제

정책보도, 후보 발표공약 전달에만 치중

모니터 기간 언급된 정책·공약은 <표 2>와 같이 부산공약을 비롯해 다양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공약으로 발표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해 2030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부울경메가시티, 경부선지하화, 북항재개발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외 각당에서 발표한 공약과 지방분권개헌, 탄소중립, 수산 공약 등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제안한 공약도 언급되었다.

가덕신공항 예타면제와 조속한 추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지원,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울경 광역급행철도 건설,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등 공공의료망 확충, 블록체인 특화도시 조성, 해사 전문법원 설립, 해양문화관광 도시 재도약
난임, 불법촬영관련정책, 플라스틱제로
블록체인특화도시조성, 가상자산업제도화공약, 가상자산개미투자자안심투자공약, 가상화폐공개허용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일자리관련공약, 한국판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단일임금체계단계적도입,
소득세인적공제확대, 문화예술공약, 노인공약
수산분야 공약, 지방분권개헌,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등 9개 분권공약 제안 등

△ 표2 모니터 기간 언급된 공약

하지만 이들 공약 대부분은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ICO 허용 검토"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국제신문, 1월 20일), <이 "예술인 기본소득' 윤 "소득세 공제 확대">(부산일보, 1월 21일)와 같이 후보와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을 나열하며 '언급'만 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후보와 정당측의 제안배경이나, 언론사의 평가는 거의 없었다.

모니터 기간 부산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전달 위주였다. 부산일보가 1월 18일 <꼭 이뤄야 할 '산업은행 부산행'...글로벌 금융도시 '지름길>에서 KDB산업은행 유치 의의와 방법 등을 설명하며 새로운 공약으로 부각했고, 대부분 보도는 진일보한 공약 이다는 평가 외 적절성, 실현가능성을 짚지 않았다.

정책 언급량은 가덕신공항 예타면제가 가장 많았지만 '이미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반영'되었다는 지적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으로 다뤘다. 부산일보는 1월 18일 <"덧북 공약" "사실 호도"...가덕 예타 면제 연일 공방>에서 여야 공방을 전했고 KNN은 1월 17일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공약 논란>에서 이미 반영된 예타면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와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완전 찬성으로 돌아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입장을 각각 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1월 16일 <[뉴스분석] 윤석열 '55보급창 이전' 공약 실현 가능할까>, 1월 23일 <부산 철도 지하화·GTX 건설…너무 닮은 대선 공약>에서 '55보급창 이전 조건' 짚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공약의 유사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온라인에서만 게재했다. 1월 21일 <윤 성에 안 찼던 부산선대위 발대식>에서는 부산선대위 발대식 규모에 윤 후보가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카더라식' 보도를 실어 후일담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였다.

부산일보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떠난 후 1월 20일 <윤석열 부산 파격 공약 뒤엔 '정책 브레인' 박성훈 있었다>에서 산업은행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울경GTX건설, 55보급창·8부두이전 등 공약 선정에 박성훈 부산시 전 부시장 역할이 있었다며 캠프 인사를 부각하기도 했다.

정책보도에 있어 후보별 치우침도 크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언급량	36	48	11	6
정책보도 속 언급량	9	15	0	0

△표3 후보별 언급량 (*월내정당 후보 기준 단순 언급 모두 포함)

모니터 기간 대선후보 언급량을 보면 윤석열 후보 48번, 이재명 후보 36번, 안철수 후보 11번, 심상정 후보 6번으로 편차를 보였다. 그런데 정책을 소개한 기사에서의 후보 언급량은 윤석열 후보 15번, 이재명 후보 9번, 안철수, 심상정 후보 0번으로 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 기사는 지지율 반등에 따른 야권 단일화 이슈 등 선거 전략과 행보 위주로 보도했고, 행보 기사 중에 부·울·경매가시티, 가덕신공항지지 여부를 단순 언급만 했을 뿐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은 어디로?

물론 후보들이 정책·공약 경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지역언론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현안을 적극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기사도, 기획보도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역 방송 3사가 신년기획으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1월 3일 방송)에 따르면, 부산시민은 우선순위로 뒤야할 지역 정책·공약으로 가덕신공항, 동·서부산 균형발전, 지역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여야가 참여하게 대립중인 원전 및 에너지 순으로 꼽았다. 지역언론이 주요 과제로 제시하는 부울경매가시티, 2030등록엑스포 등과 우선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 그림1 KBS부산 <뉴스9> 1월 3일 여론조사 결과 보도

특히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 이슈로 ‘원전 관련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원전 및 에너지 정책, 시민 안전과 모두 관련 깊은 이슈다.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 공약은 무엇인지 묻는 언론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에게 지역공약을 제안하고 지역정책을 묻는 것은 지역언론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유력 후보 행보만 쫓지 말고 지역공약이 없으면 없다 진단하고 지역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는 보도가 절실하다.

<끝>